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개인적 및 정책적 수용성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신 민 형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개인적 및 정책적 수용성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승 종

이 논문을 행정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신 민 형

신민형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2월

위 원 장 구 민 교 (인)

부 위 원 장 권 일 웅 (인)

위 원 이 승 종 (인)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최근의 급격한 외국인 인구증가 및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시작한 한국사회의 변화 배경 속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단일민족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사회는 최근에 들어 점차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인구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체류 외국인의 국가별 현황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동아시아권 및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국인이 주를 이루었던 모습에서 이제는 서양 및 유럽 국가들의 외국인 숫자 증가도 이뤄지고 있다. 거주 외국인들의 체류 목적도 이주노동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와 다르게 관광, 유학, 전문직 종사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큰 변화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다양한 각도에서 준비하고 정책적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성공적인 다문화 정책 집행을 위해 개인의 다문화사회 수용정도를 자신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살펴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수용성과 정책적인 변화를 감지하는 차원에서의 수용성을 차별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소득, 학력, 직업 요인으로 살펴본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보다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2013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안정될수록 다문화사회 수용성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소득과 학력은 높을수록 다문화사회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직업요

인은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 또한 개인적 수용성과 정책적 수용성의 차별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수용성이 정책적인 수용성보다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안정될수록 개인적인 차원에서 더 개방적인 자세로 외국인을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으나, 사회의 변화와 정책적인 변화 앞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 외국인 인구가 상당히 높은 한국사회가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다문화사회에 우호적이라는 것을 살펴본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외국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한국사회가 좀 더 폭 넓게 정책적으로 다문화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정부가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내 사회경제적 상황을 안정시키고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다문화사회, 다문화 수용성, 사회경제적 지위, 다문화 정책, 외국인 정책

학 번: 2013-21898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4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6
제1절 다문화사회 수용성 6
제2절 사회경제적 지위와 다문화사회와의 관계 8

제3장 연구 설계 12
제1절 연구 문제 12
제2절 연구 자료 수집 방법 14
제3절 연구 방법 15
1. 연구 가설 15
2. 연구 분석틀 17
제4절 변수의 측정 18
1. 종속변수의 측정: 다문화사회 수용성 18
2. 독립변수의 측정 20
(1) 소득, 학력, 직업 20
(2) 사회경제적 지위(SES: Socioeconomic Status) 21
3. 통제변수 21

제4장 분석 결과 26
제1절 변수의 기술 통계량 26
1. 종속변수의 기술 통계량 26

2. 독립변수의 기술 통계량 27
3. 통제변수의 기술 통계량 28
제2절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31
제3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32
1. 소득, 학력, 직업에 따른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 분석결과 32
2. 소득, 학력, 직업에 따른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 분석결과 36
3. 개인적 및 정책적 수용성 분석결과 비교 - 소득, 학력, 직업 39
4.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 분석결과 및 비교 42
제4절 종합적 논의 46

제5장 결론 48
제 1절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8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51

〈참고문헌〉 52
〈부록: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표〉 55

< 표 목차 >

<표 1> 설문지 문항 및 변수의 측정 23
<표 2> 종속변수들의 기술 통계량 26
<표 3> 독립변수들의 기술 통계량 27
<표 4> 정치·사회인식 연속형 통제변수들의 기초 통계량 29
<표 5> 사회참여 통제변수들의 기초 통계량 29
<표 6>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수들의 기초 통계량 30
<표 7>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 다중회귀분석결과
- 소득, 학력, 직업 33
<표 8>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 다중회귀분석결과
- 소득, 학력, 직업 37
<표 9> 개인적 및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 다중회귀분석 결과
- 소득, 학력, 직업 40
<표 10> 개인적 및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 다중회귀분석 결과
- 사회경제적 지위 43
<표 11> 연구결과 요약 46

< 그림 목차 >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 틀 1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대한민국은 과연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법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3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약 160만 명[1)]으로 국내 총 인구에 3%에 이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통계청, 2013). 2004년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75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사이에 외국인의 수는 2배, 즉 113%의 엄청난 증가를 하였다. 비록 이민의 오랜 역사와 함께 이미 다문화국가 대열에 들어선 미국, 캐나다 및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기엔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이지만, 단일민족정신을 중요시 여기는 단일민족 혹은 단일인종국가에게는 적지 않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세계화시대 도래와 함께 한국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다문화사회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사회란 한 국가 혹은 사회 속에 인종, 문화, 언어 등이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 및 집단이 함께 존재하는 사회이다 (윤인진・송영호, 2009; 박진경・원숙연, 2010; 김혜순・이시철, 2014 등). 우리나라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및 농촌의 결혼이민자의 유입과 함께 다문화사회의 시작을 알렸으며, 현재는 다문화가족 자녀, 재외동포, 외국인 유학생, 단기 체류 외국인 및 장기 거주 체류 외국인, 북한이주민 까지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 도시 중 하나인 서울시의 국내 거소신고 외국인의 수는 120만 명 중 34만 명으로 약 28%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통계청, 2013).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단기체류 등의 외국인 수를 합하면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보아 서울시는 이미 다문화사

1) 이 수치는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과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수를 전부 합한 수치이다. 201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그 중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은 약 120만 명이다.

회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주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국한되어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형태가 앞으로는 사업, 유학, 관광 단기 체류 외국인 등 더 다양한 형태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아시아계 외국인의 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유럽 및 북・남미 지역 출신의 외국인의 수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2013).

통계적 수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국가 출신의 국내 외국인 수 증가는 외국인들의 방송매체 진출에서도 볼 수 있다.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의 생각과 관점을 토론하거나, 비(非)아시아계 외국인의 가상 군 입영 체험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 등이 그 예이다. 이전에는 한국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던 것과 다르게 최근 방송매체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문화와 의견을 공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내국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낯설게 받아들이기보다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다문화사회 시민으로서의 발전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행정, 정책 분야에서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 수용성 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비한 상태이다 (원숙연, 2008; 이병량, 2012; 정명희・나항진・박외범, 2012; 김혜순・이시철, 2014). 사회학적 분야에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 또한 개인과 민족적 가치관에 연관 된 다문화주의 연구가 주를 이르고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 수용성이 사회성, 가치관 등에 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궁극적으로 개인의 가치관 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보면,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설정되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다문화사회 수용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다문화사회 수용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오랜 시간 단일민족문화를 지켜온 한국사회의 최근 급격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상황에서는 내국인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단순 노동직 및 생산직에 집중되었던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계층이 점차 상위 계층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은 내국인들의 사회적 및 경제적 지위의 변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웃과 지역사회 내에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개인적인 측면 및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에도 민감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웃과 지역사회가 새로운 문화로 변화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다문화사회 수용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적으로 수용하는 정도와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정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급변하는 다문화사회를 정책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다문화사회 수용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경제적 지위로 구분되어지는 각 계층의 사람들의 다문화 수용성의 분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다문화정책 결정 및 실행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책적인 대비를 위해서는 다문화사회 수용성을 개인적으로 수용하는 정도와 사회 변화 및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정도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외국인을 커뮤니티 안에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과 외국인이 사회 변화와 정책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문화사회를 수용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문화사회를 개인적으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연결되고 친분을 쌓아가는 것으로 인식할 때와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사회가 변화하고 나아가 개인이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정책적 서비스 및 복지혜택의 변화까지 발생한다고

할 때의 수용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다문화사회 개인적 수용성과 정책적 수용성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개인의 전반적인 다문화사회 인식정도를 이해하고, 정치·사회·정책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다문화사회 수용정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Socioeconomic Status)가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는 것이다. 즉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학력, 소득, 직업으로 측정되는 사회 내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적 및 정책적 다문화사회를 수용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 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서울특별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접근성이 높은 이유를 들 수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2003년부터 매년 약 5만 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 시민의식, 공동체의식, 주요 생활상 등을 조사하는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2013). 약 한달 동안 방문면접

을 통해 조사되어지는 서울서베이는 그 결과와 전반적인 자료를 개방하여 학문적인 연구와 정책적 방향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 서울시는 농촌이주자 외국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타 국내도시에 비해 외국인의 수가 많다. 특히 서울시는 다양한 국적, 형태, 직업군 등의 외국인이 체류하는 국제도시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 2013). 그러므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대할 기회가 많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 수용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특정 외국인 집단에 대한 편견적인 다문화사회 수용도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서울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지위와 집단의 한국인이 거주하는 도시이다. 타 도시에 고향을 두고 직업, 학업 등을 이유로 이주해온 집단을 비롯하여, 소득, 학력, 직업군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지지 않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다문화사회 수용성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3 서울서베이에 참여한 가구원 47,384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다문화사회 수용성

다문화수용성 혹은 다문화사회 수용성이라는 개념은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고, 특히 국내 행정・정책 분야에서 다문화사회 수용성의 학술적인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원숙연, 2008; 이병량, 2012; 정명희・나항진・박외범, 2012; 이재완, 2013; 김혜순・이시철, 2014). 그래서 실제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및 조작적정의가 상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수용성을 구체화하고 연구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며, 특히 정확한 개념 정립 및 기준 측정지표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리 된 다문화사회 수용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광의적 접근에서 다문화사회 수용성이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윤인진・송영호, 2010). 또한 2012년에 처음 발표 된 '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안상수 외, 2012)와 민무숙 외(2010)의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살펴 본 다문화수용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자기와 다른 구성원이나 다른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인종, 국가 등)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상호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관계설정(공존의 방향)을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며,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대할 때 출신지역이나 경제적 수준별로 차등을 두지 않으면서 세계시민의 인원으로서 보편적 가치에 입

각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총체적 의미의 태도"(재인용 김혜순・이시철, 2014)

이러한 구체적인 개념 및 정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개념으로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에 대한 태도, 다문화정책지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국민 정체성 등을 포함하여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발표 된 '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 (안상수 외, 2012)에 의해 선정된 8개 영역인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정서, 상호교류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 등도 앞으로 측정지표로 활용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다문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의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인종차별과 이주민 정책과 관련 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Calhoun, 1993; Grusky, 1994; Hammer, 2003 외 다수). 단일민족의 문화를 지켜오다가 이주 및 체류하는 외국인 수의 증가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한국과는 반대로, 이미 이민자로 국가발전을 이룩한 사례가 많으므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연구의 내용과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대한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연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다문화사회 수용성은 계속하여 연구되고 있는 중요한 연구 분야임에 틀림없다. 특히 급격하게 외국인 수가 늘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입 현상을 생각해볼 때,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의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한계점과 다문화수용성과 상당히 관련이 깊은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김혜순・이시철, 2014) 연구가 매우 미비하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다문화사회 수용성을 개인적인 수용정도와 정책적 혹은 집합적인 수용정도로 구분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차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두 가지로 구분 한 다문화사회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백승대, 안태준(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 다문화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측정 지표로 삼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측정 지료를 전자는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으로, 후자는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으로 측정하여 연구 수행하고자 한다.

제2절 사회경제적 지위와 다문화사회와의 관계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계층 내에서 한 개인 혹은 가정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종합한 지위를 말한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막스 베버의 계층이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경제적 측면으로만 접근하여 계급을 설명하는 마르크스(Karl Marx)의 계급이론의 한계점을 비판하며, 인간을 사회적 지위, 정치적 권력, 경제적 계급으로 나누어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rusky, 1994).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지위는 한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내에서 타인에 의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인정받는 서열 및 위치를 의미한다. 주로 교육수준과 직업을 기준으로 측정되고 있다. 정치적 지위 혹은 권력은 타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확률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경제적 지위는 한 개인 혹은 집단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 수입, 가계수입 등을 지표로 측정된다.

막스 베버는 특히 ‘지위불일치(Status inconsistency)’를 주장하며,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는 반드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진 않는다고 하였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하여 반드시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할 수는 없고, 반대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경제적 지위는 낮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러한 지위불일치 현상은 신분제도 등과 같은 표면적인 사회계층제도가 사라지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많이 살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내에서 어떤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한쪽에 치우지지 않고 균형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새롭게 구성 된 개념이 사회경제적 지위이다.

기존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다문화사회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다문화정책에 대한 인식의 영향요인 분석이나 혹은 다문화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등에서 가장 많이 살펴볼 수 있다 (Espenshade & Calhoun, 1993; Esses et al., 2001; 원숙연, 2011; 이재완, 2013). 이러한 기존 연구에서는 다문화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하나로 소득, 학력, 직업 등을 개인적 요인 혹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소득, 학력, 직업 등의 요인을 중요한 변수로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이들 요인을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중요 요인으로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실제 정치와 사회전반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기준이 되는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관과 인식력은 자신이 사회 내에서 갖추고 있는 지위에 따라 정립되기도 하고, 꾸준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개인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사회를 이해하는 폭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사회 내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외국인 및 다문화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 중요 요인으로 다문

화정책지지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사람들의 가치관, 신뢰도 등에 따라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 이민정책 등에 지지하는 정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는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등이 많았고,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비한 상태이다. 다문화정책의 정향성 및 지지정도를 분석하기 이전에 국내 일반국민들이 인식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수용과 인식정도를 연구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책지지 및 수용 정도를 분석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외국인을 친구, 이웃, 가족으로 수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러한 수용 정도가 정책을 지지하는 정도와의 차이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의 소득, 학력, 직업 요인들과 다문화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이 낮을수록 다문화정책에 대해 부정적이다 (원숙연, 2011). 이는 소득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의 증가에 따라 자원압박 및 일자리 경쟁압박을 받는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자신들의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제적 지위를 상실 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Esses et al., 2001).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대부분 정부의 복지정책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정책, 소수자정책, 다문화정책 등의 활성화에 뒤따르는 결과로 자신들이 기존에 받고 있던 정책적 혜택의 감소 가능성을 느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안감과 동시에 이들은 또한 다문화정책 시행으로 인한 정책비용의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Jackson et al., 2001).

둘째, 학력은 높을수록 다문화정책이나 외국인정책에 우호적인 경우가 많다 (원숙연, 2011).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 소수자 권리 등의 가치를 배우고 확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 다양성과 평등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된 개인의 경우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나 용인의 범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많다

(Espenshade & Calhoun, 1993). 또한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 외국인들의 대부분이 종사하는 직종이 전문직 보다는 생산직 및 일용직인 경우가 허다하므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크게 물질적, 경제적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Esses et al., 2001).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이다.

셋째, 학력에서 살펴보았듯이 직업 및 직종이 전문직에 가깝거나 정규직일수록 다문화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는 소득과 학력 요인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직업이 안정적이고 전문직 일수록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경제적인 위협을 덜 느끼기 때문이다(Esses et al., 2001). 하지만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무직이 아닌 사람이 다문화가족정책지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재완(2013)의 연구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 의하면 비정규직인 사람이 외국인이주정책지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달리, 정규직인 사람과 외국인이주정책지지와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직업과 관련 한 기존의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종합적인 개념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다문화사회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개별적으로 살펴 본 소득, 학력, 직업과 다문화정책과의 관계 및 영향 분석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그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사회 수용성을 개인적인 인맥 범위 내에서 인식하는 정도 수준에서의 수용성과 정책의 필요성 및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는 수준에서의 수용성을 구분하여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 문제

최근 대부분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국가는 이미 다문화사회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외국인들의 이주, 단기체류, 관광 등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외국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한국도 이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고 점차 다문화사회로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 정부가 사회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다문화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비에 앞서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문화사회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의 시작점에서, 각 개인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계층 혹은 지위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는 사회가 변화한다는 것이 사회 내에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위협요소로 받아들이는지 혹은 지위의 변화를 감수하고 사회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에 따른 다문화사회 수용성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①: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문화사회를 수용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수용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수용성이 사회 내에 외국인 이웃의 증가를 수용하는 정도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정책적으로 변화하여 궁극적으로 사회 변동까지 수용하는 정도에 이를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전자의 경우 외국인을 수용하고 다문화사회를 우호적으로 바라보지만 그것이 사회의 변동과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인식하에 수용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즉 사회 내에서 개인적으로 외국인을 이웃, 친구, 가족으로 수용하는 것과 궁극적으로 사회의 제도 및 정책의 변화로써의 다문화사회를 수용하는 것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 수용정도를 개인적 수용정도와 정책적 변화를 수용하는 정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②: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적으로 다문화사회를 수용하는 정도와 정책적 변화를 동반하는 다문화사회의 수용 정도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적 및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2013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03년부터 매 년 서울시의 현 상태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시정운영의 발전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2012). 『2013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는 2013년 10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수행 된 설문조사로, 서울시내 2만 가구 및 15세 이상 인구 47,384명을 대상으로 1:1 방문 면접조사 통해 실시되었다. 표본추출은 서울특별시가 시의 주민등록과 과세대장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구성한 모집단으로부터 층화2단 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서울특별시, 2012). 본 연구에서는 47,384명에 해당하는 가구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 데이터의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0.46%이다.[2)]

2) 서울서베이 원자료 데이터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에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공개 된 2013 서울서베이 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3절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득, 학력, 직업에 따른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다문화사회를 향한 인식은 긍정적이며 그 수용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소득과 직업이 안정적이어서 경제적 지위가 보장되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개인일수록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우호적이며,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다문화사회 수용성과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소득, 학력, 직업 요인들을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개별적인 개인적 요인 혹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보는 경향이 컸다. 하지만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사회 내 지위를 균형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 학력, 직업 등으로 분류한 개별적 요인이 아닌 종합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개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득, 학력, 직업 요인들에 따른 다문화사회 수용성을 살펴보고, 또한 이 세 가지 요인들을 종합하여 산출한 사회경제적 지위(SES)에 따른 다문화사회 수용성도 함께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소득, 학력, 직업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사회 수용성을 전반적으로 본 경향이 컸다. 하지만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입을 다양한 문화의 사람이 커뮤니티 속에 유입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사회와 정책 및 정치적인 변화를 도래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구분하여 비교한 연구는 미비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문화사회 수용성을 개인적인 다문화사회 수용성과 정책적인 다문화사회 수용성으로 나누어 측정하고자 한다. 양 수용성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 요인 즉 소득, 학력, 직업 등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큰 요인에 속하였다 (김혜순・이시철, 2014). 그러므로 본 연구의 중심가설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한다.

이 중심적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그 관계와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①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학력, 직업)가 높을수록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과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②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학력, 직업)는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보다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차별적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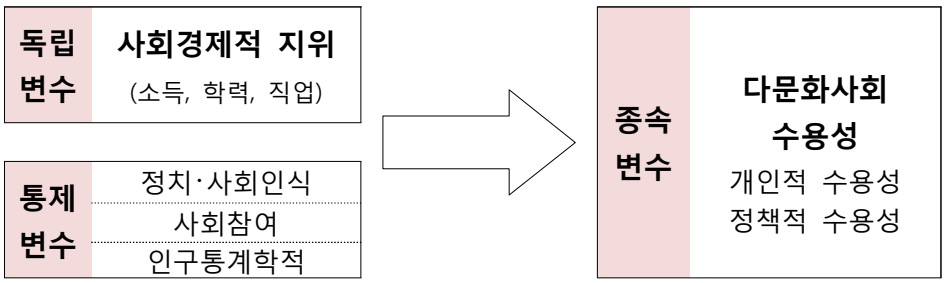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다문화사회 수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은 많을수록, 학력은 고학력일수록, 그리고 직업군은 관리자와 전문직에 가까울수록 개인적 및 정책적인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종합적인 지표인 사회경제적 지위(SES) 역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적 수용성과 정책적 수용성에 차별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적 수용성보다 개인적 수용성에 더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고, 그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다시 말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외국인을 가족, 이웃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의 개인적인 수용성은 높을 것이며, 사회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용정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2. 연구 분석 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중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분석 틀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 틀>



제4절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의 측정: 다문화사회 수용성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다문화사회 수용성은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과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 총 2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첫째,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의 측정을 위하여 사용된 설문문항은 “아래 각 항목은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과 함께 구체적으로는 1) 나 혹은 나의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2) 나는 외국인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나는 외국인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3가지 문항에 답하게 하였다. 답안 항목 매우 그렇다(5점), 약간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측정하여 합산한 점수로 측정한다.[3] 그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적인 다

3) 위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 측정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크롬바하 알파 값은 0.760이다. 즉 측정문항의 신뢰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사회 수용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개인적인 다문화사회 수용성은 개인적인 인맥 범위 내에서 인식하는 정도 수준에서의 수용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수용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외국인을 내 주변의 친구로, 이웃으로,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은 "아래 각 항목은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과 함께 구체적으로는 1)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2)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 정책이 필요하다 총 2가지 문항에 답하게 하였다. 답안 항목 매우 그렇다(5점), 약간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측정하여 합산한 점수로 측정한다.[4] 그 점수가 높을수록 정책적인 다문화사회 수용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책적인 다문화사회 수용성은 사람들이 다문화 혹은 외국인을 이해할 때 정책의 필요성 및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는 수준에서의 수용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수용도가 높을수록 외국인을 기존 사회의 구성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정책적인 변화와 사회발전을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위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 측정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크롬바하 알파 값은 0.577이다. 0.6에 조금 못 미치지만 매우 가깝게 측정되었으므로, 측정문항간의 신뢰성은 적정수준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독립변수의 측정

(1) 소득, 학력, 직업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별적으로는 개인의 소득, 학력, 직업으로 측정한다.

소득은 개인의 월평균 세전 소득을 ①100만원 미만, ②100~200만원 미만, ③200~300만원 미만, ④300~400만원 미만, ⑤400~500만원 미만, ⑥500만 원 이상에 답한 응답으로 측정한다.

학력은 ①초등학교 졸업, ②중학교 졸업, ③고등학교 졸업, ④대학(전문대) 졸업, ⑤대학교 졸업, ⑥대학원 수료/졸업에 답한 응답으로 측정한다.

직업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학생, 주부, 무직, 기타 등 총 13가지 세부문항으로 측정한 답안을 ①관리자 및 전문직 ②일반사무직 ③서비스직 ④생산, 제조 및 기능직 ⑤농림어업 및 단순노무 ⑥무직 (학생, 주부 포함) 으로 재분류하여 측정한다.[5)]

특히 본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직업을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으로 또는 직업의 유무 정도로 측정하지 않고, 직업군을 6개의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즉 사회 내에서 보편적으로 높은 지위로 여겨지는 직업군 순서대로 1에서 6등급으로 구분한다. 가장 높은 직업군은 관리자 및 전문직이며, 순서대로 일반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제조 및 각종 기능직,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직 그리고 학생과 주부를 포함한 무직으로 구분한다.

---

5) 직업군을 6가지 항목으로 재분류한 것은 중복되는 항목을 조정함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소득, 학력 변수와 동일한 총점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실제 다중회귀분석시에는 점수부여를 위하여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즉 관리자 및 전문직이 6점, 무직이 1점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2) 사회경제적 지위 (SES: Socioeconomic Status)

또 다른 독립변수인 종합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low, middle, high SES 기준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즉 소득, 학력, 직업을 측정한 각 항목수를 기준으로 각 6점을 부여하고 최하 3점, 최고만점 18점을 기준으로, 3점~7점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low SES)로, 8~12점은 중간 사회경제적 지위(middle SES)로, 13~18점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high SES)로 구분하여 측정한다.[6)]

3. 통제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정치·사회인식요인, 사회참여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총 3가지로 구분한 통제변수를 함께 측정한다. 첫째 정치·사회인식요인으로는 정치적 성향, 사회평등인식, 사회신뢰, 주관적 계층인식, 계층이동가능성 총 5가지 항목으로 측정한다. 정치적 성향은 '얼마나 보수 혹은 진보적인가' 묻는 질문과 함께 '매우 진보적'이라는 응답을 5점으로, '매우 보수적'이라는 응답을 1점으로 하여 측정한다. 사회평등인식은 '수입, 소득, 일자리/취업 기회, 대학교육의 기회, 소수자의 권리' 등 총 9가지 항목에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여 합산한 점수로 측정한다. 사회신뢰는 '가족, 이웃, 처음 만난 사람, 다른 나라 사람, 공공기관'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신뢰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계층인식은 '개인이 사회 내에서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6) 사회경제적 지위 측정은 사회학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①상상, ②상하, ③중상, ④중하, ⑤하상, ⑥하하 총 6개 항목으로 측정한다. 계층이동가능성은 개인의 노력여부에 따라 우리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를 묻는 문항에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높다’를 5점, ‘매우 낮다’를 1점으로 측정한다.

둘째, 사회참여요인은 기부여부, 자원봉사참여여부, 정당참여여부, SNS (social network service) 사용여부 총 4가지 항목으로 측정한다. 기부여부와 자원봉사참여여부 요인의 측정은 ‘지난 1년 동안 각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여부’를 측정한다. 정당 참여여부는 정당의 종류와 관계없이 ‘지난 1년 동안 정당 관련 단체 활동에 참여한 여부’를 측정한다. SNS 사용여부는 소셜 네트워크 종류에 상관없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는지’를 측정한다.[7)]

셋째,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종교유무, 주택소유 등을 측정한다. 혼인상태 측정에서 사별, 이혼 등은 미혼에 포함하여 현재 상태에 따라 측정하였다. 종교유무는 종교의 종류와의 상관없이 현재 종교 유무에 따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문항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7) 정당참여요인과 SNS사용여부요인은 응답자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항목을 표시하는 것으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 가지라도 체크한 응답자는 참여여부가 있는 것으로 코딩하였다.

<표 1. 설문지 문항 및 변수의 측정>

변수			사용된 설문 문항	측정
종속변수	다문화 사회 수용성	개인적 다문화 사회 수용성	"아래 각 항목은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복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1) 나 혹은 나의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2) 나는 외국인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나는 외국인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매우 그렇다 (5점)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5개 항목 점수의 합 ÷ 3
		정책적 다문화 사회 수용성	"아래 각 항목은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1)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2)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	매우 그렇다 (5점)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2개 항목 점수의 합 ÷ 2
독립변수	사회 경제적 지위	소득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	①100만 미만 … ⑥500만 이상
		학력	응답자의 최종 학력	①초졸 … ⑥대학원수료이상
		직업	응답자의 직업군	①무직(학생, 주부포함), ②농림어업 및 단순노무, ③생산, 제조 및 기능직, ④서비스직, ⑤일반사무직, ⑥관리자 및 전문직
		종합적 지위 (SES)	응답자의 소득, 학력, 직업 각 6점의 총 합계	①low SES (3-7점), ②middle SES

				(8-12점), ③high SES (13-18점)
정치사회인식	정치 성향	“귀하는 어느 정도 보수적 또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 (5점)… 매우 보수적 (1점)
	사회 평등 인식	“다음은 사회정의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수입과 소득 2) 일자리/취업 기회 3) 대학교육의 기회 4)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5) 도시와 농촌의 발전 6) 사회복지 7) 조세(세금)정책 8) 남녀평등 9)소수자의 권리(장애인 등)		공평하다 (5점) … 전혀 공평하지 않다 (1점) 9개 항목 점수의 합 ÷ 9
	사회 신뢰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1)가족 2)이웃 3)처음 만난 사람 4)다른 나라 사람 5)공공기관		매우 신뢰한다 (5점)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점) 5개 항목 점수의 합 ÷ 5
	주관적 계층 인식	“귀하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하하, ②하상, ③중하, ④중상, ⑤상하, ⑥상상
	계층 이동 가능성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개인이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5점) … 매우 낮다 (1점)
사회참여	기부	“귀하께서 지난 1년 간 이용한 적이 있는 기부 형태는 무엇입니까?”		있다 (=1), 없다 (=0)
	자원 봉사	“귀하는 지난 1년 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 (=1), 없다 (=0)
	정당 참여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모임 또는 단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1), 없다 (=0)

	SNS 사용 여부	응답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용 여부	한다(=1), 안 한다(=0)
인구통계학적	성별	응답자의 성별	남성 (=1), 여성 (=0)
	연령	응답자의 연령	①10대 … ⑥60대 이상
	혼인 상태	응답자의 혼인상태 (미혼=사별, 이혼 등 포함)	①기혼(=1), ②미혼(=0)
	종교	응답자의 종교유무 (개신교, 천주교, 불교, 유교, 기타=있다)	있다(=1), 없다 (=0)
	주택 소유	응답자의 주택소유여부	①자가, ②전세, ③월세/기타

제4장 분석 결과

제1절 변수의 기술 통계량

1. 종속변수의 기술 통계량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다문화사회 수용성의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2013 서울서베이의 총 응답자의 수는 서울시민 중 20,000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47,384명이다. 서울시민들의 개인적인 다문화사회 수용성은 전체 평균이 3.4106으로, 정책적인 다문화사회 수용성의 평균 3.19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질적인 사회의 변화와 외국인 정책의 수립 등 다양한 변화와 함께 인식하는 다문화사회보다 개인적으로 이웃이나 친구 등의 변화로 인식하는 다문화사회의 수용정도가 좀 더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평균의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대 5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을 때,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과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서울시민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 종속변수들의 기술 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개인적 수용성	47,384	3.4106	0.7395	1	5
정책적 수용성	47,384	3.1979	0.7545	1	5

2. 독립변수의 기술 통계량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소득, 학력, 직업 및 사회경제적 지위의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독립변수들의 기술 통계량>

변수	범주	빈도(비율%)	변수	범주	빈도(비율%)
소득	100만원 이하	969(2.0)	직업	무직	18,394(38.8)
	100~200만원	2,728(5.8)		농림어업·단순	1,765(3.7)
	200~300만원	6,404(13.5)		생산·제조·기능	2,856(6.0)
	300~400만원	12,641(26.7)		서비스직	10,759(22.7)
	400~500만원	11,530(24.3)		일반사무직	10,061(21.2)
	500만원 이상	13,112(27.7)		관리자·전문직	3,549(7.5)
학력	초졸 이하	2,218(4.7)	SES	low	5,914(12.5)
	중졸 이하	5,241(11.1)		middle	24,639(52.0)
	고졸 이하	16,888(35.6)		high	16,831(35.5)
	대학(전문대)졸업	10,848(22.9)			
	대학교 졸업	11,631(24.5)			
	대학원 수료이상	558(1.2)			

소득의 경우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이 27.7%으로 가장 높았고, 300~400만 원이 26.7%, 400~500만 원이 24.3%, 200~300만 원 13.5%, 100~200만 원 5.8%, 100만 원 이하가 2% 순으로 측정되었다. 상당수의 응답자는 월 평균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학력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전문대)

졸업이 22.9%, 대학교 졸업은 24.5%로 측정되어, 대부분의 응답자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중학교 졸업 11.1%, 초등학교 졸업 이하 4.7%, 대학원 수료 이상 1.2% 순으로 측정되었다. 직업의 경우에는 학생과 주부 등을 포함한 무직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직이 22.7%, 일반사무직이 21.2%, 관리자 및 전문직 7.5%, 생산, 제조 및 기능직 6%,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직 3.7% 순으로 측정되었다.

소득, 학력, 직업을 종합적인 지표로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지위(SES)는 각 항목을 6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합 18점 만점을 3항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그 중 8점~12점에 해당하는 middle SES가 52%로 측정되어,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중간 정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높은 정도의 사회경제적 지위인 high SES는 35.5%, 낮은 정도의 사회경제적 지위인 low SES는 12.5%로 측정되었다.

3. 통제변수의 기술 통계량

본 연구의 통제변수들 가운데 정치・사회인식요인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개인의 정치성향의 평균은 2.9387, 사회평등인식은 2.9461, 사회신뢰도는 3.0994, 주관적 계층인식도는 3.0945, 사회 내 계층이동가능성은 3.0307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정치・사회인식에 있어서 보통 정도 혹은 미비하게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4. 정치·사회인식 연속형 통제변수들의 기초 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치성향	47,384	2.9387	0.9214	1	5
사회평등인식	47,384	2.9461	0.5020	1	5
사회신뢰	47,384	3.0994	0.5705	1	5
계층인식	47,384	3.0945	0.7718	1	6
계층이동가능	47,384	3.0307	0.9498	1	5

보수적 보다는 약간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고, 사회신뢰도와 평등인식도 약간씩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경향과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관적인 계층인식은 '중상' 혹은 '중하' 등 중간정도의 계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 내에서 노력하면 계층을 이동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에서는 미비하지만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제변수들 가운데 사회참여요인과 관련 된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사회참여 통제변수들의 기초 통계량>

변수	관측치	'있다' 빈도(비율%)	'없다' 빈도(비율%)
개인기부	47,384	17,108(36.1)	30,276(63.9)
자원봉사	47,384	9,920(20.9)	37,464(79.1)
정당참여	47,384	89(0.2)	47,295(99.8)
SNS사용	47,384	9,836(20.8)	37,548(79.2)

개인이 ‘지난 1년 간 기부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수가 36.1%로 ‘기부 참여를 한 적이 없다’는 63.9%보다 낮게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역시 참여를 한 응답자가 20.9%로 참여를 한 적이 없는 79.1%보다 낮게 나타났다. 정당참여요인은 ‘참여 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99.8%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NS이용에 대한 요인을 살펴보면, 20.8%가 종류에 관계없이 SNS를 사용하고 있고, 79.1%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제변수들 가운데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관련 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6>와 같다.

<표 6.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수들의 기초 통계량>

변수	범주	빈도(비율%)	변수	범주	빈도(비율%)
성별	남자	22,745(48.0)	혼인 상태	기혼	31,512(66.5)
	여자	24,639(52.0)		미혼	15,872(33.5)
연령	10대 이하	3,199(6.8)	종교 유무	있다	23,371(49.3)
	20대	6,745(14.2)		없다	24,013(50.7)
	30대	8,934(18.9)	주택 소유	자가	27,168(57.3)
	40대	11,027(23.3)		전세	18,233(38.5)
	50대	9,181(19.4)		월세/기타	1,983(4.2)
	60대 이상	8,298(17.5)			

성별의 경우, 여자가 52.0%로 남자 48.0% 보다 약간 많았다. 연령은 40대가 23.3%로 가장 많았고, 50대 19.4%, 30대 18.9% 60대 이상 17.5%, 20대 14.2%, 10대 이하 6.8%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현재 기혼인 상태는 66.5%, 사별과 이혼 등을 포함하여 현재 미혼인 상태는 33.5%

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의 경우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등을 포함한 모든 종교의 종류와 상관없이, 종교가 있는 경우가 49.3%, 없는 경우 50.7% 보다 약간 적게 나타났다. 주택소유여부의 경우, 자가 형태가 57.3%로 가장 많았고, 전세 38.5%, 월세 및 기타 4.2% 순이었다.

제2절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과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과 주요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8)]

우선 종속변수인 개인적 수용성과 정책적 수용성은 0.38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과 학력이 0.075, 소득이 0.097, 연령이 -0.122, 정치성향이 0.083, 사회평등인식이 0.137, 주관적 계층인식이 -0.039, 사회 신뢰도가 0.131 등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과 학력이 0.012, 소득이 0.073, 연령이 -0.046, 사회평등인식이 0.181, 사회 신뢰도가 0.190, 주관적 계층인식이 0.017 등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상관관계 분석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만을 나타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검증하기로 한다.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계산한 결과, 가장 높은 VIF는 연령 1.80이며 가장 낮은 VIF는 정당참여 1.00으로 나타났다. 그 외 혼인상태 1.54, 학력 1.48,

8) 본 연구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표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직업 1.44, 소득 1.25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변수들의 VIF는 평균적으로 1.11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서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제3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1. 소득, 학력, 직업에 따른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 분석결과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적 및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중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과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중회귀분석은 동일한 통제변수들을 포함하여 두 개의 종속변수를 각각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을 구성하는 소득, 학력, 직업 변수를 따로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이후 3가지 요인들의 점수를 합하여 구분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적 및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독립변수인 소득, 학력, 직업이 종속변수인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 다중회귀분석결과 - 소득, 학력, 직업>

변수/구분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독립 변수	소득		0.042***	0.003	0.073
	학력		0.041***	0.003	0.063
	직업		-0.007***	0.002	-0.018
정치 사회 인식	정치성향		0.034***	0.004	0.042
	사회평등인식		0.192***	0.007	0.130
	사회신뢰		0.155***	0.006	0.120
	계층인식		-0.071***	0.005	-0.075
	계층이동가능성		-0.045***	0.004	-0.058
사회 참여	기부		0.041***	0.007	0.026
	자원봉사		-0.003	0.008	-0.001
	정당참여		-0.234***	0.076	-0.014
	SNS사용		-0.020**	0.009	-0.011
인구 통계 학적	성별		-0.005	0.007	-0.003
	연령		-0.056***	0.003	-0.114
	혼인상태		0.003	0.009	0.002
	종교		0.035***	0.007	0.024
	주택 소유	전세	-0.077***	0.007	-0.051
		월세 및 기타	-0.102***	0.017	-0.028
절편			2.536***	0.036	-
관측치			47,384		
R^2 (adjusted R^2)			0.071 (0.071)		
F-test			201.763***		

주: *p<0.1, **p<0.05, ***p<0.01

우선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과 학력은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표준화 계수 β값은 0.073, 학력의 β값은 0.063이다. 즉 개인의 월 평균 소득은 높을수록, 학력은 고학력일수록 외국인을 개인적으로 사회 내에서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고소득 및 고학력 계층의 사람들은 외국인을 친구 및 이웃으로 수용하는 것에 좀 더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 본 선행연구들의 (Espenshade & Calhoun, 1993; Esses et al., 2001; Jackson et al., 2001; 원숙연, 2011) 소득이 낮을수록 다문화정책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는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 편이므로, 저소득층은 이런 이주노동자들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즉 외국인을 이웃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인맥의 증가로도 인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또 다른 경쟁적인 관계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개인적인 다문화사회 수용성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직업변수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직업 변수의 경우 (β=-.0.018), 직업은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관리자 및 전문직에 가까울수록 외국인을 개인적인 사회 내에서 수용하는 것에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무직 혹은 학생과 주부일수록 다문화사회에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선행연구의 결과와 상반 될 뿐 아니라, 소득이 높을수록 다문화사회에 우호적이라는 분석결과와도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고용형태가 정규직이거나 직업군이 전문직 일수록 소득이 높은 경향이 많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소득은 높을수록 다문화사회에 긍정적이나, 직업군은 전문직 일수록 다문화사회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모순적인 결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적인 결과는 본 연구에서 소득, 학력, 직업을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아닌, 사회경제적 지위(SES)로 구분하여 중요 설명변수 및 독립변수로 측정한 이유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통제변수들 중 정치사회인식과 관련 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정치성향, 사회평등인식, 사회신뢰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주관적인 계층인식과 계층이동가능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보적인 성향을 가질수록, 사회가 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사회 내에서 위치하고 있는 계층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사회 내에서 노력 여부에 따라 계층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인식할수록 다문화사회 수용에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사회참여와 관련 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기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것과 반대로 정당참여와 SNS사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였다. SNS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다문화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결과는 다소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가정으로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외국인 범죄 및 부정적인 사례 등이 공유되는 현상이 다소 많고, 외국인들과 관련 된 긍정적인 사례 보다 부정적 사례가 더 쉽게 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 외국인 이주민이 가해자로서 벌어진 다수의 성범죄 등이 SNS를 통해 알려지기도 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SNS의 이용을 통해 다문화사회를 다소 소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성별과 혼인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였고, 종교유무는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연령과 주택소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득, 학력, 직업에 따른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소득, 학력, 직업이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소득의 경우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과 직업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β=0.062), 이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문화정책 및 외국인정책에 좀 더 우호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을 개인적인 인맥 및 커뮤니티 내 새로운 이웃과 친구로 수용한다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던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과 달리,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은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사회로의 정책적, 사회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소득 계층일수록 사회의 변화 및 정책적인 변화와 지원을 수반하는 다문화사회를 좀 더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8.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 다중회귀분석결과 - 소득, 학력, 직업>

변수/구분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독립 변수	소득		0.036***	0.003	0.062
	학력		0.003	0.004	0.005
	직업		-0.001	0.002	-0.001
정치 사회 인식	정치성향		-0.010***	0.004	-0.012
	사회평등인식		0.236***	0.007	0.157
	사회신뢰		0.225***	0.006	0.170
	계층인식		-0.008*	0.005	-0.008
	계층이동가능성		-0.030***	0.004	-0.038
사회 참여	기부		0.054***	0.007	0.034
	자원봉사		-0.023***	0.008	-0.012
	정당참여		-0.173**	0.077	-0.010
	SNS사용		-0.039***	0.009	-0.021
인구 통계 학적	성별		0.001	0.007	0.001
	연령		-0.028***	0.003	-0.055
	혼인상태		-0.030***	0.009	-0.019
	종교		0.041***	0.007	0.027
	주택 소유	전세	-0.058***	0.007	-0.038
		월세 및 기타	-0.038**	0.017	-0.010
절편			1.903***	0.37	-
관측치			47,384		
R^2 (adjusted R^2)			0.072 (0.072)		
F-test			205.361***		

주: *p<0.1, **p<0.05, ***p<0.01

반면에 학력과 직업 변수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개인의 학력과 직업군은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학력이 높고 낮은 경우나 혹은 직업군이 전문직이거나 혹은 무직인 경우나 다문화사회를 사회적 변동과 정책적 변화로 수용하는 것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통제변수들 가운데 정치·사회인식과 관련 된 요인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성향, 주관적 계층인식, 계층이동가능성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평등인식과 사회신뢰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이 진보적 일수록 정책적 변화를 포용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분석결과는 기존연구들의 결과와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이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감이 높게 나타났고, 그로인한 사회 변화와 정책 변화를 지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원숙연, 2011; 김정규, 2013; 이재완, 2013).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개인의 정치 및 이념성향이 진보적 일수록 정책 및 사회적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정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요인과 관련 된 요인들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기부를 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당참여, SNS사용여부 요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요인들과 관련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혼인상태, 종교, 주택소유여부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은 사회 및 정책적 변화가 동반 된 다문화사회의 수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연령은 높을수록 그리고 기혼자일수록 정책적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 정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개인적 및 정책적 수용성 분석결과 비교 - 소득, 학력, 직업

종속변수인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과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의 회귀분석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양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의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소득은 양 수용성에 동일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학력과 소득은 개인적 수용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 반면, 정책적 수용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이 고학력일수록 외국인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직업 변수의 경우, 기존 연구들에서도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는 직업은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재완, 2013).

<표 9. 개인적 및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 다중회귀분석 결과 - 소득, 학력, 직업>

변수/구분			개인적 수용성			정책적 수용성		
			B	SE	Beta	B	SE	Beta
독립변수	소득		0.042***	0.003	0.073	0.036***	0.003	0.062
	학력		0.041***	0.003	0.063	0.003	0.004	0.005
	직업		-0.007***	0.002	-0.018	-0.001	0.002	-0.001
정치사회인식	정치성향		0.034***	0.004	0.042	-0.010***	0.004	-0.012
	사회평등		0.192***	0.007	0.130	0.236***	0.007	0.157
	사회신뢰		0.155***	0.006	0.120	0.225***	0.006	0.170
	계층인식		-0.071***	0.005	-0.075	-0.008*	0.005	-0.008
	계층이동		-0.045***	0.004	-0.058	-0.030***	0.004	-0.038
사회참여	기부		0.041***	0.007	0.026	0.054***	0.007	0.034
	자원봉사		-0.003	0.008	-0.001	-0.023***	0.008	-0.012
	정당참여		-0.234***	0.076	-0.014	-0.173**	0.077	-0.010
	SNS사용		-0.020**	0.009	-0.011	-0.039***	0.009	-0.021
인구통계학적	성별		-0.005	0.007	-0.003	0.001	0.007	0.001
	연령		-0.056***	0.003	-0.114	-0.028***	0.003	-0.055
	혼인상태		0.003	0.009	0.002	-0.030***	0.009	-0.019
	종교		0.035***	0.007	0.024	0.041***	0.007	0.027
	주택소유	전세	-0.077***	0.007	-0.051	-0.058***	0.007	-0.038
		월세	-0.102***	0.017	-0.028	-0.038**	0.017	-0.010
절편			2.536***	0.036	-	1.903***	0.37	-
관측치			47,384					
R^2 (adjusted R^2)			0.071 (0.071)			0.072 (0.072)		

F-test	213.183***	216.489***

주①: *p<0.1, **p<0.05, ***p<0.01

주②: B: 비표준화계수, SE: 표준오차, Beta: 표준화계수

학력과 소득 변수가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분석결과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 인식에 대한 현 상황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급격한 외국인의 증가로 한국사회는 현재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나, 사람들은 아직 다문화사회를 제도와 정책적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우호적으로 수용하고 또 다른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에 그쳐있거나 혹은 정책적, 제도적인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인정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득 요인이 양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살펴보면,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 수용성의 비표준화계수 B=0.042이고, 정책적 수용성의 B=0.036으로 그 차이가 크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개인적 수용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학력(개인적 수용성 B=0.041, 정책적 수용성 B=0.003)과 직업(개인적 수용성 B=-0.007, 정책적 수용성 B=-0.001)의 변수들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정책 수용의 정도보다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 내에서 이웃과 친구로서 외국인을 수용하는 정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설명변수들의 결과 중 괄목할 만한 결과는 개인의 정치성향 요인이다. 정치성향은 양 수용성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에 정책적 수용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존연구들과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로써,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외국인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과 반대된다.

4.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 분석결과 및 비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적 및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중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소득, 학력, 직업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봄과 동시에 종합적인 지표로 환산하여 세 개의 계층으로 구성 된 사회경제적 지위(SES)의 영향력도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경제적 지위는 높지만 (고소득) 사회적 지위는 낮은 경우 (하위 직업군 혹은 저학력) 가 그 예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균형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종합적인 변수로 측정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 점수에 따라 high(13-18점), middle(8-12점), low(3-7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측정 된 독립변수인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개인적 및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개인적 및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 다중회귀분석 결과 -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구분			개인적 수용성			정책적 수용성		
			B	SE	Beta	B	SE	Beta
독립	SES		0.069***	0.006	0.061	0.037***	0.006	0.032
정치사회인식	정치성향		0.037***	0.004	0.046	-0.010***	0.004	-0.012
	사회평등		0.194***	0.007	0.132	0.238***	0.007	0.159
	사회신뢰		0.152***	0.006	0.117	0.222***	0.006	0.168
	계층인식		-0.058***	0.004	-0.061	0.001	0.005	0.001
	계층이동		-0.044***	0.004	-0.057	-0.029***	0.004	-0.037
사회참여	기부		0.047***	0.007	0.030	0.057***	0.007	0.036
	자원봉사		-0.007	0.008	-0.004	-0.022***	0.008	-0.012
	정당참여		-0.234***	0.076	-0.014	-0.178**	0.077	-0.010
	SNS사용		-0.015*	0.009	-0.008	-0.038***	0.009	-0.020
인구통계학적	성별		-0.017**	0.007	-0.012	-0.007	0.007	-0.004
	연령		-0.067***	0.003	-0.137	-0.032***	0.003	-0.064
	혼인상태		0.025***	0.009	0.016	-0.027***	0.009	-0.017
	종교		0.038***	0.007	0.025	0.043***	0.007	0.028
	주택소유	전세	-0.095***	0.007	-0.063	-0.059***	0.006	-0.045
		월세	-0.136***	0.017	-0.037			
절편			2.685***	0.035	-	2.041***	0.037	-
관측치			47,384					
R^2 (adjusted R^2)			0.066 (0.066)			0.070 (0.070)		
F-test			209.829***			236.875***		

주①: *p<0.1, **p<0.05, ***p<0.01

주②: B: 비표준화계수, SE: 표준오차, Beta: 표준화계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적 및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 된 분석결과는 소득, 학력, 직업 변수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적 및 정책적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이는 소득과 학력이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첫 번째 회귀분석결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업 변수가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소득상태와 학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직업군이 고위직인 경우 즉,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 다문화사회를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컸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경제적 요인을 포함하여 개인의 사회 내에서의 지위를 사회경제적 지위로 고려하여 보았을 경우에는 지위가 높을수록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다문화사회 인식 정도가 우호적이고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 학력, 직업으로 세분화 하여 살펴 본 첫 번째 회귀분석결과에서는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이었지만 학력과 직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 아니었다. 즉 경제적 지위(소득) 는 정책적인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사회적 지위 (학력, 직업) 는 통계적으로 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가 아닌 경제적 요인이 포함 된 사회경제적 지위는 정책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다문화사회를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수용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과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적 수용성에 좀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 수용성 비표준화계수 B=0.068; 정책적 수용성 비표준화계수 B=0.037). 그 차이가 상당할 정도는 아니지만, <표 9>에 나타난 첫 번째 회귀분석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경제적 지위는 정책적 수용성에서 보다 개인적 수용성에서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우호적으로 수용하고 친구와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에 그쳐있거나 혹은 정책적, 제도적인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인정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다.

제4절 종합적 논의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결과 요약>

		다문화사회 수용성	
		개인적	정책적
사회경제적 지위	소득	(+)	(+)
	학력	(+)	.
	직업	(-)	.
	종합적 SES	(+)	(+)

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요인은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과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수치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보다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력과 직업 요인은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또한 학력은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직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득, 학력, 직업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사회경제적 지위(SES) 요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양 수용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각 개인이 사회 내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가 다문화를 이해하고 외국인을 동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에 분명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적 지위(소득) 가 높을수록 다문화사회에 좀 더 적극적인 우호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그러한 긍정적인 수용성은 사회 정책의 변화를 함께 인식하는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보다 개인적 수용성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 본 사회경제적 지위(SES) 요인의 분석결과도 살펴보면, 개인적 수용성에서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중심가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적 및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세부가설을 지지하며, 양 수용성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역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외국인을 이해하고 다문화사회를 수용하는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학력, 직업)가 높을수록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과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서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보다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차별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만 여 가구의 약 5만 여명의 가구원들을 주된 연구대상을 삼고 2013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살펴보면, 개인의 소득, 학력, 직업 요인은 다문화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득은 낮을수록 다문화정책에 부정적이며, 학력은 높을수록 다문화사회에 우호적이고, 직업은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직업이 전문직 일수록 다문화정책에 긍정적인 결과도 존재하고, 반대로 고용형태가 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정책에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기도 한다 (Esses et al., 2001; Espenshade & Calhoun, 1993; 원숙연, 2011; 이재완, 2013).

다양한 검증을 통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우선 연구가설을 일부는 지지하고 일부는 기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소득과 학력은 개인적인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

하였고, 직업 요인에 대한 결과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구분하여 보지 않고 종합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로 검증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다. 즉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은 우호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보다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였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는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는 높지만 경제적 지위는 낮은 경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개인이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균형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였고, 각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정부의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인 부분이 안정되고 불확실하지 않을수록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더욱 우호적이며, 다문화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지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의 사회로 점차 진입하고 있는 현 한국사회에서 국민들이 외국인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외국인 수가 상당히 높은 한국사회에서는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외국인들을 수용하고 함께 자원을 공유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안정되고 높을수록 다문화사회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역시 이러한 중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인식적 다문화사회 수용성과 함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부의 제도와 정책적인 대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한국사회는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외국인을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으나, 사회의 변화와 정책적인 변화 앞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보장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다문화사회 수용성이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 보다 높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다양한 인종과 문화권의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한국사회가 좀 더 폭 넓게 정책적으로 다문화사회를 대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다른 정책적인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경제적 지위(소득)가 사회적 지위(학력,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정책결정자가 경제적인 여건에 초점을 두어 정책 결정 및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비 및 다문화 정책과 외국인 정책은 경제정책과 연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확대적인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도 시사한다. 둘째 사회적 지위 중 특히 직업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결과는 정책집행자로 하여금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줄여준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직업 요인 보다 경제 요인 및 경제 정책에 비중을 두고 다문화사회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이러한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다문화사회 수용성은 아직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개인적 수용성과 정책적 수용성에 한정하여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다문화사회 수용성은 아직 연구가 미비한 분야이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탐구와 이론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들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는 표준화 된 측정지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다는 점과 기존의 연구들도 유사하긴 하지만 각기 다른 형태의 측정지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지속적인 측정지표 연구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인위적으로 보장해주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개인의 소득, 학력, 직업은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 교육정책, 취업정책 등으로 간접적이나마 지원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정치·사회인식요인, 사회참여요인, 정치적요인 등과 상대적 우위 비교를 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표본은 서울시민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은 가장 다양하고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외국인 접촉 기회가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지방에서는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대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외국인 비율을 분류하여 지역별로 다문화사회 수용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서울특별시. (2013). 2012년 기준 서울서베이 보고서.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서울특별시. (2014). 『2013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윤인진. (2007). “7장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김남국. 동북아시대위원회. 페이지 251-291 발췌.

전영평 외. (2010). 『한국의 소수자 정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통계청. (2013). 인구조사 통계자료.

2. 국내 논문

강휘원. (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5-34.

강휘원. (2007). 한국의 다문화사회 형성과 지방정부.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1: 169-206.

김정규. (2013). 경쟁과 위협. <사회이론>. 2013년 봄/여름: 199-237.

김혜순. (2013). 이슈와 쟁점: 국가공인 통계인 ‘다문화수용성조사’의 문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4): 275-278.

김혜순・이시철. (2014). 국가별 관심 편중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측정: 대구 달서구 사례의 실증 분석. <지방행정연구>, 28(1): 89-114.

민무숙・안상수・김이선・김금미・조영기・류정아. (2010).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개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박진경・원숙연. (2010).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정책 정향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4(3): 191-217.

백승대・안태준. (2013). 대구와 경북 지역 청소년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비교 연구. <지역사회연구>, 21(3): 29-51.

안상수 외. (2012).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2-2.

원숙연. (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3): 29-50.

원숙연. (2011).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의 영향요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4): 561-589.

원숙연. (2011). 인종적 소수자를 위한 다문화정책 수용성의 영향요인: 적극적 조치와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4): 327-351.

윤인진・송영호. (2009).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발표논문.

이병량. (2012). 한국 정책연구에서 다문화정책 연구의 경향 분석: 다문화정책 연구의 지평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한 제언. <한국행정논집>, 33(4): 1243-1262.

이시철・김혜순. (2009). 지방 국제화 논의와 다문화 담론: 의제화, 정책,

측정. <한국행정연구>, 18(2): 109-139.

정명희・나항진・박외병. (2012). 다문화 정책정향성과 다문화 수용성간의 영향 연구. <국제지역연구>. 16(3): 345-366.

3. 국외 단행본 및 논문

Espenshade, T. & Calhoun, C. (1993). "An analysis of Public Opinion toward Undocumented Immigration".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12(3): 189-224.

Esses, V., Dovidio, J., Jackson, L., Armstrong, T. (2001). "The Immigration Dilemma: The Role of Perceived Group Competition, Ethnic Prejudice, and National Identity".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389-412.

Grusky, D. B. (1994). *Social Stratification: Class, Race, and Gender in Sociological Perspective*. Boulder, Colo.: Westview Press.

Hammer, M. R., Bennett, M. J. & Wiseman, R. (2003). "Measur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4): 421-443.

Hood, M. & Morris, I. (2000). "Brother, Can You Spar a Dime? Racial/ethnic Context and the Anglo Vote on Proposition187". *Social Science Quarterly*. 81(1): 194-206.

< 부록: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표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개인수용	1														
2.정책수용	.386***	1													
3.학력	.075***	.012***	1												
4.소득	.097***	.073***	.243***	1											
5.직업	.007	-.002	.468***	.129***	1										
6.연령	-.122***	-.046***	-.156***	-.179***	.028***	1									
7.성향	.083***	.006	.146***	.079***	.043***	-.283***	1								
8.평등인식	.137***	.181***	-.020***	.033***	-.013***	.030***	-.029***	1							
9.사회신뢰	.131***	.190***	-.032***	-.029***	-.013***	.038***	.020***	.156***	1						
10.계층인식	-.039***	.017***	.152***	.278***	.064***	-.039***	.002	.035***	.028***	1					
11.계층이동	-.036***	.003	-.002	.072***	-.026***	-.018***	-.016***	.162***	.060***	.209***	1				
12.기부	.037***	.035***	.106***	.102***	.055***	-.050***	.037***	-.007	-.023***	.056***	.017***	1			
13.자원봉사	.008*	-.005	-.071***	.011**	-.053***	-.127***	.016***	-.026***	.022***	.019***	.011**	.060***	1		
14.정당참여	-.018***	-.012***	.009**	-.003	.012***	.020***	-.021***	-.003	-.003	.016***	.008*	.007	.015***	1	
15.SNS	.031***	-.006	.106***	.087***	.043***	-.313***	.118***	-.041	-.041***	.017***	.048***	.074***	.045***	.005	1

주: *p<0.1, **p<0.05, ***p<0.01

Abstract

The Effect of Individual's Socioeconomic Status on Multicultural Acceptance

- A Comparison between the Personal and Policy Acceptance -

Minhyung Mindy Shi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individual's Socioeconomic Status (SES) on the multicultural society acceptance. Even though Korean society has a long history of being racially homogeneous nation, the recent indications show that Korean society is gradually transform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For instance over the past 10 years,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has been rapidly increasing, and it is continuously growing. Especially those foreigners who mainly used to be people from the East and Central Asia are now relatively showing more increase of Europeans, Americans, and foreigners from other countries visiting and staying in Korea. The

purpose of visiting Korea has also changed from migrant labor to other various reasons such as travel, education, and professional business. These are considerable changes to be acknowledged, and Korean society and government should prepare and develop new policies to support the multicultural society.

Therefore in order to successfully make and enforce multicultural polices on local commun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individual's level of acceptance about multicultural society based on their Socioeconomic Status. It also analyzes and compares two different type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 personal and a policy acceptance. For the analysis, this study assumes that the Socioeconomic Status, examined by income, education level, and a type of employment, would positively influence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It also hypothesizes that the Socioeconomic Status would have more positive effect on the personal multicultural acceptance than the policy acceptance. This hypothesis is verified by conducting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2013 Seoul Survey』

The significant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evident analysis shows that an individual with the higher and more stable Socioeconomic Status, specifically income and education factors, positively accept multicultural society. However, interestingly the types of employment show little negative influence or statically insignificant to be considered as no effects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Secondly, the Socioeconomic Status has more positively influence on the personal acceptance than the policy acceptance. In other words, people who have a high Socioeconomic Status tend to understand and accept foreigners as their new community members at the personal

level. On the contrary, they tend to be relatively passive to accept multicultural society at the policy level, regarding to the social changes and political and policy reformation.

Overall the main mark of this academic study informs that Korean society where there are increasing immigrant workers is willing to embrace foreigners at the socioeconomic point of view.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by acknowledging the changes the community faces including rapid increase of foreign population and new foreign policies improvement. In other words, this study discloses the importance in stabilizing domestic, social, and economic status before promoting multicultural policies.

Keywords: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acceptance, Socioeconomic Status (SES), Multicultural policy, Foreign policy

Student Number: 2013-21898